

# 정부 “5G 투자하면 감액” vs 이동사 “투자 연계조건 부당”

##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

정부, 5G 기지국 수량 반영 제시  
많이 세울수록 주파수 가격 하락

이동사 제시 수준의 두배 가격차  
기지국 목표기준도 현실성 없어

말 많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가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절충안이 실현 불가능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5G 기지국 구축 많을수록 주파수 가격 ↓…최소 3.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석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지환 실장이 주파수 이

## 〈주파수 할당대가 투자옵션 제시〉

투자옵션(사업자당 무선국수)	할당대가(3사 합계)
~3만국 미만	4.4조원±α
3만국 이상~6만국 미만	4.1조원±α
d 6만국 이상~9만국 미만	3.9조원±α
c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7조원±α
b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3.4조원±α
a 15만국 이상~	3.2조원±α

과기정통부

용환경 변화와 가치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다.

재할당 주파수는 내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G·3G·4G 총 주파수 320메가헤르츠(MHz)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MHz를 제외한 310MHz가 대상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정책안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수량을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즉, 5G 기지국을 많이 세울수록 3G와 LTE 주파수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

이에 따라 5G 기지국을 최대 15만국 이상 구축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최소 3조2000억원 안팎으로 책정될 예정

이다. 기지국 구축에 따라 많게는 4조원 이 넘게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옵션은 ▲15만국 이상은 3조2000억원 ▲12만~15만국은 3조4000억원 ▲9만~12만국 3조7000억원 ▲6만~9만국 3조9000억원 ▲3만~6만국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 4조4000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사 “현실성 없고 근거도 없어”… 갈등 지속될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에 비해 다소 완화된 절충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이동통신사가 제시한 주파수 적정 할당대가인 1조6000억원 수준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가격차를 보여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계는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反)한다”며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했었거나 2018년 5G 할당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부

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 조건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5G 무선 기지국 목표 기준 또한 현실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2022년까지 정부에 약속한 투자 목표에 이동통신사의 놓여준 5G 로밍 수량을 합해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측은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수립된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은 기존 정부가 해왔던 대가 산정 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재할당 대가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KT 측은 “5G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로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며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종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또한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이자 이종부과에 해당돼 중대한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며 “LTE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 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부의 공개설명회에 대해서도 이동사 측은 “일방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사는 최근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10년간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주파수 재할당 억제안을 하는 등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릴리와 코로나 치료제 생산 개시

항체 치료제 장기 생산계약  
기술이전 기간 약 3개월 단축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일라이 릴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장기 생산 계약을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신속하게 치료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릴리가 개발한 코로나19 중화항체 치료제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량 생산함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비드 A. 리스 릴리 회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중화항체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바이오 의약품 산업계에서는 중화항체의 글로벌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릴리의 계약으로 릴리는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은 전 세계 환자들에게 릴리의 항체 치료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릴리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고있는 코로나19 치료

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위탁 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릴리사와의 협업을 강화해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GMPL에 부합하는 의약품 초기 물량을 생산하고 릴리에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조선업계 수주 총력전

### 현대중·삼성중 등 VLCC 잇단 계약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수주 목표를 채우기 위해 막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0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9857억원에 달한다. 이들 선박은 현대중공업(7척)과 현대삼호중공업(3척)에서 건조돼 2023년 8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발주된 전 세계 VLCC 30척 가운데 21척 따내 70%의 수주율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총 85척, 63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액의 57.3%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도 이날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수에즈막스(S-Max)급 원유 운반선 3척을 총 1946억원에 수주했다. 이들 선박은 2023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S-Max 선박은 화물을 가득 실은 상태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12만5000~20만톤급 선박으로, 이번 계약엔 2척의 옵션이 포함돼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가 탑재돼 친환경 규제에 적합하고, 선주사의 운항 조건에 최적화된 선형 등 연료 절감기술이 적용돼 운항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삼성중공업은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스마트십 솔루션 ‘에스베슬’도 탑재해 선박의 안전 운항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확정

###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정부는 내년부터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들을 기능적 통합해 3단계 구조로 재편·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

산의 전주기를 ‘분절’에서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해 공공기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사업의 성과지향적 연계 ▲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고도화라는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분산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을 통합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 과기정통부 소관 8개 세부사업에 대해 통합모델 구축을 적용하고, 2022년부터 연관된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연구성과의 수요-공급 간극을 3년 이내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 5개 바이

오, 나노·소재, ICT 융합 등 5개 분야에서 중개연구단을 신설해 연구단별로 3년간 매년 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기관간 협업·소통체계 확립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성과 창출기관(한국연구재단)과 중개·활용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간 연구성과 정보 공유를 정례화하고, 사업화 유망기술(Pool)을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에 산·학·연 혁신주체간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범부처 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를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연

계·동기화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기술사업화 중개인력·조직이 참여하는 6대 기술 분야, 4개 영역 오프라인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연구자)과 시장(기업)이 일체화된 연구개발 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해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연구성과 사업화와 제조·지식재산(IP)·금융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제조 부문에서는 공공연구성과물의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내년 62억원)을 육성하고, 연구장비 성능평가와 시험·분석 지원도 추진한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